

국민농업운동의 추진방향과 과제



정재돈 이사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며

대자연은 순간의 몸부림으로 문명의 한 모퉁이를 깡그리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공포에 전 세계가 마음조리며 주시하고 있다. 그에 앞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이 땅의 공장식 축산을 휩쓸어 전국토를 무수한 생명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대재앙을 경험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설, 혹한 등 각종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이러한 대재앙을 계기로 어디까지가 과연 사람의 영역인지 되돌아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다. 아울러 모든 피조물들이 사이 좋게 공생하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지, 특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 식량 - 에너지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식량 · 에너지 · 자원 · 환경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산업이자 공간이 농업 · 농촌이다. 농업 · 농촌의 기여 없이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는 지속 불가능하다. 즉,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

는 국민 식생활의 유지 향상, 활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자연 및 국토환경의 보전 관리, 21세기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생활공간,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후인생과 자기실현의 장, 생태적 감수성과 협동적 문화를 체화하는 창의적 자립적 인재의 양성 공간으로서 기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농업농촌을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인식하여 그 자체의 온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겠으나, 이와 같은 부문적 시각에서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국방 · 국토 · 자연 · 교육 ·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국가 유지의 기간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과 도시민, 농업과 공업(서비스업), 농촌과 도시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동반성장해야 하고, 이에 농업농촌 보호와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최근 국가신성장동력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전국적으로 농업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3년째 농업 · 농촌 · 농민의 3농 문제 해결

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것 등을 반
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산업·공간보다
미래가치가 밝으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
의 이러한 비전들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직해내야 할 책무가 농업·농촌을 생
각하는 이들에게 시급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요
청되고 있다.

2. 국민농업, 무엇을 겨냥할 것인가? (국민농업운동의 추진방향)

국민농업은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이
해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시키지 않고
국민 전체가 직접 농업의 이해 당사자가 되도록
한다. 농업·농민이 먹을거리라는 상품을 생산
하는 산업·생산자에 그치지 않고, 식량 및 에너
지 주권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 지역사회와 공동
체의 유지 활성화,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권
의 실현 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만드는 국민경제·국가사회의 뿌리로
그 지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중요성을 갖는 국민농업의 목
표는, 농민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
장,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도
농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이다. 이야말로 도
시와 농촌, 일반 국민과 농민이 함께 사는 '21세
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조건이
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추진전략은, 농정 패러다임 혁신, 식량주권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 지역순환
형 생명환경농업 체제 구축과 도농 간 생산 - 유
통 - 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네트워크
건설이다.

3. 국민농업운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민농업운동의 과제)

이상과 같은 국민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
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가.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운동

오늘날 먹을거리체계(food system)는 곡물
메이저를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국내 식
품가공 및 유통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원격지
먹을거리체계이다. 수확 후 농약처리와 많은 푸
드마일리지로부터 발생하는 먹을거리 오염과
환경 부하, 지역 농업 해체와 농민 이탈 및 하강
분해, 생태환경의 파괴,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
역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먹을거
리살림운동은, 일정 지역 단위로 생산자와 소비
자가 먹을거리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순환경제(지역순환농업)이다. 공공기관(학
교, 정부 및 산하기관, 군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 및 기타 용도로 대량 구입하는 농
산물을 가능한 지역 산 구매 제도화, 지역 내 보
건복지용 먹을거리의 지역 산 구매 의무화, 지
역먹을거리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에 대한 세제금융 및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
을 추진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향후 10년간 영국의 주요 학
교나 병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1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다. 미국에서도 거주 지역에서 160km 이내에
서 나오는 농식품만 소비하자는 '100마일 다이
어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잘 알다시피 지산지소 운동으로 발전, 학교급
식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향후 5
년간 30%로 높여나가고 있다.

나. 생활협동조합운동, 1사1촌, 도농교류협력 운동의 전면화

도농협력형 생활조합으로 한살림, icoop생활연합회, 두레생활연합회, 여성민우회생활협 등 그 조합원이 50만을 넘기고 있다. 또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가톨릭농민회와 연대하여 일상적 생명농산물 나눔을 비롯한 오리농법이나 유기축산을 통한 지역순환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공동체에서 오리와 암송아지 입식을 지원하고 나중에 오리고기와 쇠고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도농공동체운동을 펴는 사례도 있다. 불교의 108개의 절을 순회하며 지역농산물판매행사를 하는 사례도 있으며, 구례군농민회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자매결연으로 농산물을 나누는 사례를 비롯하여, 수많은 1사1촌 농촌사랑운동 등을 1노1농, 1교1농, 1군1농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식생활 교육 국민운동의 전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식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 건전한 식생활과 전통식문화와 식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활동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정규 수업일수로 갖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실현하는 기본조건이라 하겠다. 미국의 비만과의 전쟁, 프랑스의 미각교육, 이태리의 슬로푸드운동, 일본의 식육(食育)운동 등에서 보듯 밥상교육의 중요성과 절박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간의 노력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5년마다 점검 및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지난 해 4월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인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의

3대 핵심 가치를 환경·건강·배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목적인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목적인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역에너지자립운동

(local energy system)

식량·에너지·환경 위기의 시대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책도 없다. 화석에너지 종속형 관행농법에서 탈피,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도 최선의 지역에너지 자립운동이며, 나아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농촌형 에너지 전환운동 또한 국민농업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가나 마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와 1사1촌 결연운동의 주요과제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간 도농 녹색교류운동의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햇빛(태양광)발전소 건설운동이다. 이 운동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와 농업을 위한 에너지주권운동으로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 도시생태농업운동의 추진

도시생태농업은 가정의 화분농사, 담벼락농사, 옥상 텃밭농사, 도시 유희지 농사, 도심 주말농장, 공원의 농장화, 학교 생태학습지, 병원의 원예치료지 등 모든 가능한 형태로 도시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의 순환구조를 통해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국민농업운동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 내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생태적 농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통해 안전한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미 유럽(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알로트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투인, 러시아의 다차 등), 일본(시민농원), 미국(백악관 텃밭 등), 쿠바 등지에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및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할 ‘(가칭)도시생태농업지원센터(법)’를 설치,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먹을거리 안전 및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시민감시운동 추진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과 표시 기준 위반 등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건강권 침해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한 행정의 감시 단속도 허술한 편이다. 이에 수입산 먹을거리의 검사·검역체계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표시 기준의 강화운동을 전개한다(예를 들면 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제 적용 품목의 전면 확대 : 현재 콩·옥수수·콩나물·감자 등 4개 품목 국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비의도적 원료 혼입을 1% 미만으로 강화 : 유럽 수준. 한국은 3%까지 허용.), 또한 원산지 표시 음식점 확대 조치에 따른 감시활동을 추진한다(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기준 음식점을 기존 300㎡(음식점 수의 3% 범위)에서 100㎡으로 확대).

사. 농산어촌 탐방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적극화

농산어촌 탐방, 막걸리투어, 식농기행, 지역 축제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보급하여 농촌방문 체험 기회를 각계각층에 대폭 확

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의 농촌 어메니티 100선, 가볼만한 지역축제 10선, 아름다운 마을 콘테스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면 좋겠다.

아. 국제식량농업다양성협약 체결운동 등 국제 연대 활동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체결 운동이란 WTO체제아래 추진되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세계화나 시장통합이 ‘다양하게 공존하던 각국의 고유한 농업과 식문화를 심각히 파괴하고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등 인류의 식량농업 체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기초로 천부불가침의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예,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이를 위한 국내외 운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 국민과 함께 농정개혁운동 전개

오늘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실상 농민만이 고군분투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업문제는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과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국민 홍보와 국민 행동을 조직하여 범국민적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지상주의와 소수 선별적 규모화·단작화·개별화의 엘리트주의 농정에서 다양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계층의 농가들을 협동화·조직화·복합화·다각화로 이끄는 상생과 순환의 농정, 농업만이 아니라 농업·식품·환경·지역·문화·복지 등을 포괄하는 통합농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추구한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은 무엇보다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곧 농민과 지역

주민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분권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할 농정개혁과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농업·농지의 적정규모 유지), 지역농업 조직화, 협동조합 구조개혁과 품목별 협동조합 전면 촉진 및 농협 주도의 유통개혁, 조건불리지역 진흥특별대책(접경지역 농업발전특별법 등), 직접지불제 확대 및 농업예산 확충,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정책, 품목별 농업 관측시스템 강화 및 수입농산물 조기경보장치 마련, 긴급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제도 개선, 검역 강화, 식품산업과 국내농업 간 연계성 제고와 국가차원의 식품안전대책 수립, 지력회복과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차원의 지원, 학교·기업·군대·관청 등 단체급식의 국산농산물 조달 우선 및 저소득층 식비보조제도 전면 도입(학교급식은 연차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성농민 지위 향상과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한 통합지원정책, 농업재해보상법 및 농작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농어촌복지 담당 종합기구 설치, 농어촌복지특별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전통식문화와 농업농촌 체험교육, 우리 농식품과 농적 가치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탄소배출표시인증제 실시, 농정추진체계의 민주화와 분권화, 농민의 농정 주체화, 농업회의소 설립, 남북농업협력 제도화 및 남북 공동식량농업계획 수립 실천(북측의 식량 및 농자재 부족을 남측의 잉여 쌀 의무수입량 만큼과 농자재 지원으로 관련 공장 가동을 제고, 논 면적 유지) 등등 산적해있다.

4. 농촌과 농민의 국민농업 실천과제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개혁은 여전히 농민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대와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함께 농사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대안'이어야 한다. 즉 무엇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자신이 먼저 생명과 평화의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농민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필수조건이다. 농민이 건강한 먹을거리와 신명나는 놀 거리, 볼거리, 쉴 거리, 잘 거리를 누리며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농민이 행복하게 살 때, 농민이 사는 곳이 '농촌다울' 때, 이를 전제로 도시와 국민도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운동의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민주화, 지역순환 경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농민운동은 지역농업조직화, 즉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를 조직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지역먹을거리운동을 비롯한 도농상생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가. 자원순환 유기농업체계 / 지역순환 사회경제체계 실천과 도농 간 상생체계 구축 : 대외종속 공장식 농축산업에서 자립순환의 진지 구축으로

자립·협동·상생의 농업시스템으로서 지역순환 생명농업의 실천과 도농 상생체계 구축은 종자·에너지·농자재·기술·자본·원료·농법·시장의 내외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자립화이다. 도농 상생체계 구축은 조직화된 도시소비자와 생활상의 동맹(생협, 1사1촌, 또는 회원제 농장)부터 추진한다.

**나. 자주관리운동으로서 지역농업 조직화
활동 추진 : 개별 독농가 중심에서 지역
함께로**

고립분산적인 소생산자, 영세소농경영의 가족농들이 자본과 시장과 권력에 대응, 지구력을 갖게 하기 위해 생산협동을 조직하지 않는 활동은 농업발전의 기본적인 도구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농업’이란 일정지역에 있어 농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아래 개별경영의 차이를 집단적 협동적 조직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전개하는 일정 지역의 농업을 말한다. 지역 내 한정된 자원(토지, 노동력, 자본)을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업의 유기적 복합경영, 마을영농의 확대, 개별경영과 공동경영의 효율적 연계, 중소농과 대농의 협동경영, 농민 주도의 가공유통 협동화, 생산자원의 유기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어떤 형태로서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개방농정 아래 소농(나아가 대농까지)의 농업생산에는 협동화가 필수조건이며, 특히 지역순환 생명농업운동의 근거지(진지), 나아가 도농연대의 공동체적 기반 구축사업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갖는다.

**다. 농업 농촌의 총체적 가치에 입각한
국민(지역사회연대)농업운동 추진 :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농업농촌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적 이해와 요구(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촌다운 농촌 조성, 생태보전 및 국토관리 등)에 대답하는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순환 생명농업운동의 조직화와 연대, 농촌지역사회 내 세 계층의 조직화와 연

대, 노동운동과의 연대,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 학교와의 연대, 문화예술인과의 연대, 방송언론과의 연대,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 소비자 국민과의 연대 등을 폭넓게 전개한다.

**라. 자주적 협동조합 건설운동 및 현행
농협구조개혁운동 추진 : 반대에서 참여로**

다양한 지역농업조직화를 토대로 자주적 협동조합을 건설하며 현행농협의 농민적 재편을 추진한다. 영농조합 등 지역농업조직의 협동조합적 모범 운영에 의한 농민주체의 실질적 농협을 건설한다. 아울러 현행농협을 농민주체의 자주적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합개혁활동을 추진한다.(대의원협의회 활동, 이·감사 등 임원 진출과 타 조합 임원들과의 이·감사 연대 결성, 조합운영 민주화와 조합경영 혁신 추진, 조합장 진출 조합 협동조합 전형창출) 생산조정, 출하조정, 가공유통마케팅 등의 협동화와 전문화 등 대형마트의 농산물유통시장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판매로 대처하는 길 뿐이다. 영농조합법인을 통하든,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혁신을 통해서든 농민운동이 해내야 할 사활적 과제이다.

**마. 지역생협운동 추진과 지역연대운동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
하방연대**

지역자립, 지역자치, 지역구심력으로서의 다양한 지역생활협동 활동을 추진한다. 즉 지역사회연대농업·농민장터·지산지소 등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활동, 지역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협 조직, 사회적 기업·워커즈콜렉티브를 통한 노인복지·가사/간병도우미·육아교육·노령독거농가의 영농도우미·결식아동급식 등 사회서비스 활동의 협동화, 지역통화나 마

이크로크레딧 등 지역신용 창출, 마을도서관·농민아카데미·문화패·공부방 등 지역교육문화 활동, 농민약국이나 의료생협 등 지역보건의료 활동, 햇빛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등 지역에너지체계의 대안적 모색 등 활동과제의 폭을 넓혀간다.

바. 지역과 기층에서의 연대연합 강화

지역에서의 농민단체 간 농민연합 강화 : 조례제정을 통한 상설 농업회의소 또는 농민위원회, 활동가 연합아카데미 운영, 품목별 조직, 농축협 이·감사연대, 농축협 대의원협의회 공동운영, 지역농정 및 예산 수립·집행 공동 참여개입(농민 참여 없이 농정 없다, 농민단체 업그레이드 없이 농정업그레이드 없다), 친환경농업조직, 생협 조직, 환경운동조직, 학부모조직, 교원조직, 노조조직, 지산지소운동, 도시농업운동 공동 실천 등.

지역정치력 장악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 부문조직간 연대 강화 : 상설 자치연대회의, 참여 예산제 및 예산 감시운동, 지방행정 민관협치체계 구축, 식생활교육위원회 참여와 식교육 실시, 푸드마일리지 및 탄소배출표시인증제 확대운동, 지역화폐 운동, 단체급식센터 공동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 공동운영, 지역리더아카데미 개설 운영 등.

노농연대, 농학연대, 농군연대 등 상시 추진 : 1노1농 1교(校)1농 1교(教)1농 1군(軍)1농 결연운동, 학교급식 직장급식의 지산지소운동, 노농주말농장, 지역연대운동 활성화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정치 공동실천, 선거 국면 공동대응활동 등.

5. 마치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 위기는 바로 우리 사회·나라·인간의 지속 가능 위기이다. 농업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기본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통자본(SOC)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존·생활조건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농업농촌의 가치와 공공적 위상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사랑과 참여 속에 농업·농촌이 본연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실현이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의 길이다.

최고의 농업도, 최고의 삶도, 본래 농적(農的) 가치라 할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무릇 생명은 다양성(독창성)·관계성·순환성을 속성으로 한다. 평화란 생명의 이런 속성들을 조화롭게 균형지우는 과정·상태·구조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재조명, 재편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의식과 생산·생활방식을 바꾸는 자기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안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모시고 살리기 위해 협동하며 생명의 속성인 다양성·관계성·순환성을 드높이고, 밖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체의 요소들과 치열하게 대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 건설해가길 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의 길은 농업·농촌에 있다. ㉞